

보도 일시	2022. 1. 3.(월) 12:00	배포 일시	2022. 1. 3.(월) 12:00
담당 부서 <총괄>	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공기업지원과	책임자 담당자 담당자	과 장 남호성 (044-205-3771) 사무관 김경옥 (044-205-3779) 사무관 이동훈 (044-205-3990)

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, 역대 최대 규모

- 전년대비 36조원 증가,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경제회복 마중물 역할 -

-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·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, 2021년에는 지방재정의 89.3%를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인 468조원의 집행실적을 보였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는 243개 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, 최종 집행액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468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.
 - * 집행규모 : '20년 432조원 → '21년 468조원(+36조원)
 - * 자치단체 유형별 집행규모(()는 전년대비 증가액)
 - 광역 217.2조원(+21.6조), 기초 204.4조원(+7.9조), 지방공기업 46.4조원(+6.1조)
- 특히, 자치단체 세입추계를 포함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 및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함으로써, 46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케 해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,
 - 아울러,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 운영,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,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였다.

① 지방재정의 전략적·확장적 운용 및 체계적 집행관리

-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추경 실시 등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.

- 특히, 민간의 소비와 경제회복에 영향이 큰 소비 및 투자 관련 예산은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고,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을 통한 변경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사업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였다.
- 특히, 대규모 투자사업은 매월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선급금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으며,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소비예산의 당겨집행 등을 통해 민간소비도 촉진하였다.
-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또한 지난해보다 6.1조원이 증가한 46.4조원을 집행하는 등 지역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였다.

② 상시 집행관리체계 운영과 중앙-지방 협력 강화

- 지방재정의 신속·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행안부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, 시·도 기획관리실장, 시·군·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「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」을 설치·운영하고,
 - 행안부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, 시·도 기초실장회의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운영하였다.
 - 아울러,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은 재정관리점검회의(기재부) 상정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신속히 해결하였다.
 - 철근수급 불안, 국비교부 지연,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중앙부처의 사전행정절차 협의 등 집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하여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하였다.
- * 연내 집행에 애로가 있었으나 해소된 사례
 (경기) 과천 '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' 택지(LH) 신속 매입(150억원 집행)
 (전남) 해남 '지표수 보강 개발사업' 환경영향평가(환경부) 신속 협의(55억원 집행)

③ 재정집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운영

-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지역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개선 및 각종 보증금 인하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관련 예산의 집행을 지원하였다.
 -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입찰보증금·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50% 인하하였으며(~'22.6월)

- 긴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하고,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,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.
- 한편, 행정안전부는 '22년에도 지방재정이 지역 및 민생경제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(목표 60%이상)을 강화하는 등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-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이 최대규모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.”며 “올해에도 선제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